

일반논문

먹거리 신뢰의 구조적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김흥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이 연구는 먹거리 신뢰(food trust)의 구조적 특징과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먹거리 신뢰수준은 어떠한가? 먹거리 위험(food risk) 관련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시장은 먹거리 위험회피에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동은 먹거리 신뢰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먹거리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풀어가기 위해, 2011년 8월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430명에 관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결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먹거리 신뢰 군집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 자기가 잘살고 있다고 믿는 집단,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역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먹거리 안전을 신뢰하지 않는 군집은 20~30대의 고학력 집단, 전업주부들,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바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먹거리 대안운동(alternative food movement)에 관심이 많거나 참여하는 집단이었다. 둘째, 먹거리 신뢰는 제도에 대한 믿음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구조적 신뢰보다 관계적 신뢰, 대인 신뢰(personal trust)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제어: 먹거리 신뢰, 먹거리 위험 사회, 먹거리 대안운동, 사회 신뢰, 대인 신뢰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59).

I. 머리말

한국에서 먹거리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배경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던 먹거리 파동들이 있다. 2006년 학교급식 식중독 파동, 2008년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2010년 구제역 파동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히고 있지만, 그것의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최근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72.3%가 먹거리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전쟁과 안보 위험(52.1%)이나 테러 위험(43.5%)보다도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SK 먹거리지속가능성연구팀, 2011: 11-13). 그만큼 먹거리 관련 위기의식이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먹거리와 관련된 위험과 불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과거의 먹거리 불안은 먹을 것에 대한 접근성 문제 때문에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기아와 결식문제가 더 심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먹거리 불안은 안전과 신뢰 문제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먹거리 신뢰(food trust) 문제는 위험과 불안의 핵심 요인이다. 이를테면 위험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규칙의 집행자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훨씬 더 큰 사회적 불안감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정진성·이재열·조병희·구혜란·안정옥·장덕진·고형면·장상철, 2010: 258).

먹거리 신뢰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 보장, 정책, 기관, 생산, 유통, 시장, 정보 등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는 근대의 먹거리 체계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의 먹거리 체계는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적 먹거리 생산, 고도로 상품화되고 세계화되어 있는 먹거리 유통, 지불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선택 가능한 포디즘적 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있다.

이렇게 고도로 산업화되고, 상품화된 근대 먹거리 체계는 먹거리 생산과 유통에서 생산자, 공간, 시간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은 먹거리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소비하는 먹거리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박형신, 2010: 171). 이제 소비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생산했는지 알 수 없는 먹거리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 알 수 없음은 소비자에게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하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미지의 것은 정의상 위협과 불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Furedi, 2004: 138-139).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먹거리 신뢰구조는 매우 다층적이다. 대상을 보면 정보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등이 있고, 유형으로 보면 구조적(제도적) 신뢰와 관계적 신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신뢰구조와 그 특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먹거리 불안과 위협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위협, 불안, 공포, 파동, 운동의 동학(dynamics)과 먹거리 정치의 메커니즘을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먹거리 신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두 가지 연구모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낮은 신뢰, 즉 불신의 원인과 그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둘째, 신뢰의 형성을 전제로 하여 먹거리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그 파동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전자는 결과로서의 신뢰, 후자는 원인으로서의 신뢰를 설명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는 원인으로서의 신뢰형성의 과정과 변인을 설명하려 했다. 이를테면 신뢰와 위협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신뢰가 위협 인식을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Flynn, Burns and Slovic, 1992; Siegrist, 2000; Pennings, Wahsink and Meuleuberg, 2003).¹⁾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뢰구조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다.²⁾

이 연구에서는 먹거리 신뢰구조를 설명하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뢰의 구조적 특징과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먹거리 신뢰수준은 어떠한가? 먹거리 위험관련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시장은 먹거리 위험에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가? 시장과 유통에 대한 일반신뢰는 어떤 수준인가? 먹거리 정보와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적인 먹거리 신뢰와 대인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풀어가기 위해, 2011년 8월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430명에 관한 면접 조사결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먹거리 신뢰의 의미

신뢰는 위험연구 분야에서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신뢰와 위험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1) 페닝(Pennings)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3개 국가를 대상으로 광우병에 대한 태도와 쇠고기 구매행태를 비교해본 결과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가 국가 간의 차이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Pennings et al. 2003).

2) 사회자본이나 신뢰연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있다 해도 주로 통계적 기술이나 그 통계치의 집단별 비교나 상관관계 제시 수준에 멈추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은 연구자의 분석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인과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박병진, 2007: 66).

보면 신뢰가 위험인식을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lynn et al., 1992). 또한, 신뢰는 관계의 장기지향성을 높이고, 관계에 몰입하도록 하며,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Morgan and Hunt, 1994). 위험관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상실은 위험의 수용 및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 소통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는 사적 신뢰(private trust)와 공적 신뢰(public trust)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 신뢰는 대인 관계에서의 신뢰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신뢰와 일반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이라기보다는 추상적 타인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미시적 수준을 넘어 개인의식 속에 공유된 집합적, 사회적 수준의 일반신뢰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먹거리 신뢰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공적 신뢰는 사회 내의 제도나 규범, 더 나아가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로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주요 조직이나 규범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Pagden, 1988; Putnam, 1993). 이는 경험적 분석 차원에서 국가 기관이나 시장조직,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구체적 제도와 관련된 신뢰로도 활용한다. 먹거리 신뢰에서는 공적인 위험관리, 먹거리 정책, 정보제공과 소통, 시장조정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다. 일반신뢰 혹은 사회참여 활동이 공공 이슈에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제도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해 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공적 신뢰가 사회자본의 중심이 된다(Boix and Posner, 1998).

먹거리 불안과 파동은 신체에 현실화된 위해가 아니라 ‘예상된’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하지만, 또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의 확보나 위험의 망각을 통해 사라진다. 이러한 먹거리 파동에 작동하는 감정 범주들이 바로 신뢰와

불신,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공포이다. 셀러버그(Sellerberg, 1991)에 따르면, 먹거리의 신뢰(또는 불신)는 인간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태도이다. 왜냐하면 먹거리는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자신이 소비하는 먹거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박형신, 2010: 175).

먹거리 신뢰는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나타나는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먹거리 안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관적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객관적 실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주관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먹거리 신뢰는 행위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형성에서의 신뢰 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적 신뢰는 ‘주어진 것(the given thing)’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a making process)’이 중요하다. 연결망에 속한 두 행위자의 잦은 교환은 그들의 관계를 감정적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반복적인 교환을 통해 부드럽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하며, 교환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그러한 감정이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는 정보와 소통이 중요하다. 2008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정보의 불신, 2012년 5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이를 잘 설명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먹거리 신뢰를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신뢰와 생산자와 관련된 관계적 신뢰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2. 먹거리 신뢰의 영역과 관련 요인

1) 정부 영역

먹거리 위협의 특징은 객관적 위협이나 위해요소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위협하다는 인식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먹거리 위협의 해소, 즉 신뢰 형성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 이러한 매개체가 바로 정부의 공적 활동이다. 즉 정부기관과 관료, 식품안전과 위함관리, 먹거리 지식과 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먹거리 일반신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³⁾

신뢰형성에서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먹거리 부문만이 아니다. 사회신뢰의 구축과 회복에 있어서도 정보의 공정한 배분과 불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이재혁, 1998). 이렇게 형성되는 공적 신뢰는 게임의 규칙을 투명하게 만들고, 규칙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 신뢰구조를 보면, 다양한 기관과 조직 중에서 특히 국회와 정부, 검찰 등 정부 영역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심각하다. 이를테면 사회기관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신뢰 차이를 비교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각종 제도·기관 대부분에서 낮은 신뢰를 보였고, 특히 중앙정부부처는 -35.9%p, 국회는 -57.1%p나 낮게 나타났다(이재혁, 2006: 72). 정부 영역에 대한 불신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공적 신뢰가 상실된 사회에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이는 위함관리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은 이를 의도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신뢰는 높아질 수가 없다. 따라서

3) 한 사회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 확보에서 국가나 전문지식체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먹거리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박형진, 2010: 176).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신뢰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야만 한다. 많은 연구는 정부 신뢰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공개와 소통수준, 그리고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매개 역할을 한다. 시민의 참여와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 공공 이슈에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제도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다는 것이다(Boix and Posner, 1998).

반면에 정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사회적 저항(social protest)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사람일수록, 사회저항에 참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세(Kasse, 1999)는 정치를 비롯한 국가기구와 비정부기구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저항에 참여 정도가 크다고 말한다. 한국 역시 이에 해당한다. 특히 먹거리는 불확실한 상황과 정보 때문에 위험과 불안을 확산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신뢰 형성에 있어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여주는 정부 영역의 공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회참여나 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기관을 불신하고 정치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보 획득이 많아지고, 이러한 정보의 축적이 정부에 대한 학습된 불신이라는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을 만들어 저신뢰 구조를 만들고 지속하기 때문이다.

2) 시장 영역

근대의 먹거리 체계는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적 먹거리 생산, 고도로 상품화되고 세계화되어 있는 먹거리 유통, 지불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선택

할 수 있는 포디즘적 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있다. 이렇게 고도로 산업화되고, 상품화된 근대 먹거리는 필연적으로 시장과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 최근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받는 글로벌 농식품체계(global agro-food system)를 발전시킨다. 이 체계의 작동방식은 먹거리 안전(food safety)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으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사회 전체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윤병선, 2004; 김철규, 2008; McMichael, 2005).

그동안 근대 먹거리 체계가 만들어 온 먹거리 안전 수준은 국가의 통제체계를 통해서 최대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강화되는 글로벌 먹거리 체계의 작동은 식품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산 멜라민 파동, 광우병 파동, GMO 파동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제 먹거리 위험은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고, 위험 영역 자체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인간의 민감도가 최대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먹거리 위험은 복합위험(complex risk)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의 시장조정이나 통제기능이 약화하면, 대다수 식품은 기업의 단기적 이익과 효율성 논리에 따라 생산·유통되며, 이는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건강의 가치를 시라지게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논리, 이윤중심의 생산,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안전한 먹거리보다는 더 싼 먹거리의 더 많은 생산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 포디즘적 체계는 더욱 길고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생산만이 아닌 유통과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피하다(Kim and Curry, 1993). 그러나 이러한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실제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양심에 맡기고, 국가통제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여기에서

담합과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먹거리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아진다.

2008년 8월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진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2008년 촛불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은 국회, 정부, 검찰 다음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정진성 외, 2010: 182). 반면에 최근 먹거리 위험성 관련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대규모 식품가공업체(이하 ‘대규모’)에 대한 신뢰 수준은 31.2%로 소규모 업체의 1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마트에 대한 신뢰도 31.8%로 소규모 슈퍼마켓의 17.1%보다 높게 나타났다(SSK 먹거리지속가능성연구팀, 2011: 17-18). ‘대규모’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식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생산 대기업, 대형 마트, 호텔 식당, 고급 레스토랑 등에 대한 상대적인 신뢰 경향이 이를 보여준다. 반면에 소규모에 대한 불신 경향은 먹거리 파동(사건)을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즉, 재래시장이나 소형 식당의 위생문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위해요소 첨가 문제가 먹거리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3) 시민사회 영역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2008)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음식과 식품에 관한 관심과 염려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곧 먹거리 신뢰가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라는 ‘시민성(citizenship)’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알려준다.

시민성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의 특성을 결정한다. 장수찬(2002: 104-105)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일반 이론과 달리 오히려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민주적 시민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정치적 참여가 높아지고 이는 정부에 대한 정보량을 증대시키는데, 미숙한 민주주의 정권 아래에서 활발한 사회참여는 부정적 정보의 획득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신뢰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이수인, 2010: 173). 활발한 시민정치 참여로 인해 정부의 전문지식체계와 이들에 의해 제조된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가를 알게 된 것도 정부를 불신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정보들은 먹거리 신뢰의 기반이기보다는 오히려 과학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울리히 벡의 지적대로, “위험의 근원은 더 이상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Beck, 1992: 183).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은 위험의 근원으로써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지식과 정보는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먹거리와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을 경고하는 지식은 다른 지식보다 더 신뢰를 받는 경향이 있다(박형신, 2010: 179). 시민은 위험 정보, 위험 지식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의 신뢰는 무엇보다도 정보 수준, 소통 수준, 관계 형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개인의 탈물질적 가치가 정치제도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잉글하트(Inglehart, 1997)는 탈물질 가치를 지닌 사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탈물질 가치가 확대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각국에서 정부신뢰의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이코비(Jacoby, 1988)는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라는 정치적 가치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신뢰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탈근대적 개인가치가 먹거리에 대한 신뢰 회복 전략으로서의 대안체계를 보다 더 선호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대안성 여부가 먹거리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의 경험적 분석 자료는 2011년 7월 21일에서 8월 18일 사이에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30명을 일대일 면접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 층화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으로 가구를 추출하고, 지역과 성, 연령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할당방식으로 개인을 추출하는 2단계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6\%$ 이다.

이번 조사 자료의 특이점으로는 거주지역과 연령에 있어서 전국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읍·면 지역을 포함하였으며(전체 표본의 15.0%), 연령별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20.1%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19.4%, 30대 20.8%, 40대 22.1%, 50대 17.6%이다. 성별 분포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남성이 48.9%, 여성이 51.1%를 차지하고 있다.

2. 변수구성과 기술통계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구체적 변수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변수는 크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부 영역에 대한 신뢰, 시장 영역에 대한 신뢰,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전체 먹거리 신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전성 신뢰와 생산자 신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 건강 평가, 지역규모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 변수 구성 및 기술통계

	사례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변수구성
인구·사회변수						
연령	1430	19	89	44.28	14.59	연령 실수
성별_여성	728	.00	1.00	.51	.50	여성=1, 남성=0
교육수준_고졸	415	.00	1.00	.29	.45	고졸=1, 중졸=0, 대졸 이상=0
교육수준_대졸	789	.00	1.00	.54	.49	대졸 이상=1, 중졸=0, 고졸=0
주관적 계층	1430	0	10	4.61	1.62	낮다(아래)=0, 높다(위)=10
건강 평가	1430	0	10	6.12	1.84	매우건강하지못함=0, 매우건강=10
지역_대도시	707	.00	1.00	.49	.50	대도시=1, 중소도시(동)=0, 읍면=0
지역_중소도시	509	.00	1.00	.36	.48	중소도시(동)=1, 대도시=0, 읍면=0
정부						
활동평가	1430	1.00	7.00	3.42	1.12	(관리수준+대응수준+관리능력+정보투명성+정책공정성)/5, $\alpha=.924$
정보신뢰	1430	1.00	4.00	2.16	.61	(광우병정보+쇠고기협상+구제역정보)/3, $\alpha=.873$
기관평가	1430	1.00	5.00	3.00	.85	식품행정기관
시장						
대형기관 신뢰	1430	1.00	5.00	3.00	.66	(국내대기업+해외대기업+대형마트)/3, $\alpha=.782$
소형기관 신뢰	1430	1.00	5.00	3.00	.55	(국내중소기업+슈퍼마켓+재래시장+아파트일몰시장)/4, $\alpha=.760$
시민사회						
시민단체 신뢰	1430	1.00	5.00	3.40	.75	생협(한살림, 아이쿱 등)
언론정보 신뢰	1430	1.00	5.00	3.40	.66	(TV+신문)/2, $\alpha=.826$
전문기관 신뢰	1430	1.00	5.00	3.47	.73	(식약청+외국식품기관)/2, $\alpha=.785$
신뢰						
안전성 신뢰	1430	1.00	4.00	2.49	.56	먹거리 안전 확신 정도
생산자 신뢰	1430	1.00	7.00	4.34	.90	먹거리 생산자에 대한 신뢰정도

정부 영역 신뢰는 기존의 공적 신뢰, 제도 신뢰, 구조 신뢰와 관련된 연구들을 참고하여 정부의 먹거리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주요 먹거리 파동 당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 식품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정부 활동 평가는 위험관리수준, 위험에 대한 대응수준,

위험관리능력, 정보 투명성, 정책 공정성 등 5개 문항으로 하였으며, 내적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1점,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7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먹거리 위험이 정치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public concern)’ 때문이다(정진성 외, 2010: 36). 객관적 위험의 확률이 같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훨씬 민감한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2008년 미국 쇠고기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먹거리 파동에 대한 정부 정보 신뢰수준에 따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가 결정된다. 이러한 정보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부 정보 신뢰도, 정부 발표 정확성, 그리고 2010년 구제역 관련 정부 정보 신뢰도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1점,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4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행정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에 대해 불신할수록 1점, 신뢰할수록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73에서 .9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시장 영역 신뢰는 기업, 시장, 유통센터 등 시장 기관들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들의 규모에 의해 신뢰 정도가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를 반영하여, 대규모 기관과 소규모 기관으로 나누어 신뢰수준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먼저 대형기관은 대규모로 식품을 가공하는 국내 식품업체, 대규모로 식품을 가공하는 해외 식품업체, 대형마트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불신할수록 1점, 신뢰할수록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소형기관은 소규모로 식품을 가공하는 국내 식품업체, 소규모 슈퍼마켓, 재래시장, 아파트 알뜰시장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불신할수록 1점, 신뢰할수록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760에서 .782로 문항 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영역 신뢰는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수준, 언론매체의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보의 신뢰수준, 그리고 먹거리 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대안 먹거리 소비단체인 생협(한살림, 아이쿱 등)에 대한 신뢰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언론기관은 TV 뉴스나 프로그램 정보 신뢰, (활자) 신문이 제공하는 안전 정보 신뢰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문기관은 한국 식품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외국 식품관련기관(FDA, WHO 등)이 제공하는 정보 신뢰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785에서 .826으로 문항 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에 대한 신뢰는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대인신뢰에 해당하는 먹거리 생산자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했듯이 먹거리 신뢰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먹거리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는 먹거리 위험은 결국 안전성 여부다. 즉, “내가 섭취하는 먹거리가 안전한가?”의 결정이 신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은 생산체계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안전성과 생산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먹거리 안전성 신뢰는 “평소 구입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확신하지 못한다”에 1점을 “거의 항상 확신한다”에 4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생산자 신뢰는 각종 유통기관에서 구입한 식품의 생산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에 1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에 7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IV. 분석

1. 먹거리 신뢰수준과 특성

“평소 식품을 구입할 때 자신이나 가족에게 안전한 먹거리라고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항상 확신한다”는 응답이 1.6%,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48.4%를 차지하여 전체의 50%가 안전을 확신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안전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2점으로 평균(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유통기관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농수축산물 + 가공식품 생산자)들에 대한 신뢰수준을 질문한 결과 “신뢰한다”가 37.8%인 반면에 “신뢰할 수 없다”가 11.4%로 나타나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전체 평균은 7점 만점에 4.4점으로 평균(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식품 안전 신뢰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은 10대, 20대, 50대와 30대와 4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세 집단에서 신뢰 차이가 있었다. 60대 이상에서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0대의 중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0~40대는 민주화와 사회참여 세대로서 이들이 저신뢰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은 일정 부분 세대 효과(cohort effect)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⁴⁾ 교육수준은 학력이 낮을수록 신뢰수준이 낮았으나 고졸과 대졸의 차이는 없었다. 스스로 계층이 높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그리고

4) 연령대별 차이를 해석할 때 특정 세대만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오는 세대 효과인지, 아니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나이들 효과(aging effect)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적 사항들은 글렌(Glenn, 1984)을 참고하라.

〈표 2〉 먹거리 안전성 신뢰와 생산자 신뢰

	불신	보통	신뢰	합계	평균	비고
안전성 신뢰	1.9	48.1	50.0	100.0	3.2	1(불신) - 4(신뢰)
생산자 신뢰	11.4	50.8	37.8	100.0	4.4	1(불신) - 7(신뢰)

주 1) 안전성 신뢰에서 '신뢰'는 “거의 항상 확신한다”와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를 합한 것임.

2) 생산자 신뢰에서 '불신'은 1-3점, '신뢰'는 5-7점에 응답한 경우를 합한 것임.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일관되게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안전성 신뢰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일종의 경험(체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먹거리 생산에 직접 참여해보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가 다른 연구들과 차별적인 것은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집단이 연령별, 학력별로 매우 다른 위험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로 보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은 여성들은 먹거리 위험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30대 주부만을 별도로 분석해보면 남성 집단 보다 훨씬 민감하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김선업·이해진·김철규, 2012: 16-17)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생산자 신뢰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계층과 건강상태, 그리고 지역규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응답자 스스로 계층이 높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신뢰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과 하위 집단에서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생산자들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안전성 신뢰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검증값 (t, F)	p
	일반적 특성	집단				
성별	남		702	2.50	0.464	.642
	여		728	2.49		
연령	10대		22	2.50 ^{ab}	5.013	.000***
	20대		259	2.47 ^{ab}		
	30대		300	2.43 ^b		
	40대		320	2.44 ^b		
	50대		250	2.52 ^{ab}		
	60대 이상		279	2.63 ^a		
	중학교 졸업 이하		226	2.67 ^a		
식품 안전 성 평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415	2.48 ^b	12.824	.000***
		대학교 졸업 이상	789	2.46 ^b		
주관적 계층	상		179	2.60 ^a	6.090	.002**
	중		653	2.52 ^{ab}		
	하		598	2.44 ^b		
건강상태	상		845	2.53 ^a	4.850	.008**
	중		367	2.47 ^{ab}		
	하		218	2.40 ^b		
지역	대도시(7대 도시)		707	2.45 ^b	5.263	.005**
	중소도시(동)		509	2.52 ^{ab}		
	읍·면 지역		214	2.58 ^a		

주: 평균 점수 위의 알파벳은 던칸(Duncan)의 사후검증 결과로 같은 문자가 있는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이하 동일).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생산자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여기에서 생산자는 가공업자까지 포함되었지만, 응답자들은 농촌지역에서 식재료 생산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동일 직종에 종사하거나 주변의 친밀하게 접촉하는 집단에서 나오는 동일시(identifying) 효과로 보인다.

〈표 4〉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생산자 신뢰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검증값 (t, F)	p
	일반적 특성	집단				
생산자 신뢰	성별	남	702	4.35	0.231	.818
		여	728	4.34		
	연령	10대	22	3.91	1.928	.087
		20대	259	4.32		
		30대	300	4.38		
		40대	320	4.28		
		50대	250	4.42		
		60대 이상	279	4.37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26	4.46	2.614	.074
		고등학교 졸업	415	4.28		
		대학교 졸업 이상	789	4.34		
	주관적 계층	상	179	4.54 ^b	5.579	.004**
		중	653	4.35 ^a		
		하	598	4.28 ^a		
	건강상태	상	845	4.43 ^b	10.276	.000***
		중	367	4.26 ^a		
		하	218	4.16 ^a		
	지역	대도시(7대 도시)	707	4.30 ^a	3.256	.039*
		중소도시(동)	509	4.35 ^{ab}		
		읍·면 지역	214	4.48 ^b		

2. 먹거리 관련 정부활동 평가

식품을 공식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제도적 신뢰 수준을 평가하여 보았다. 먼저 정부 식품 당국의 먹거리 위험관리 수준을 질문한 결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한 반면에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43.9%에 달하였다. 정부 당국의 위험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전체의 54.9%가

〈표 5〉 먹거리 관련 정부활동 평가

	부정	보통	긍정	합계	평균	비고
위험관리	43.9	37.6	18.5	100.0	3.5	1(잘 관리) - 7(잘못 관리)
위험대응	54.9	25.8	19.3	100.0	3.3	1(신속대응) - 7(잘못대응)
관리능력	49.1	31.9	19.0	100.0	3.4	1(충분) - 7(부족)
정보투명성	51.0	33.1	15.9	100.0	3.4	1(투명공개) - 7(공개안함)
정책형평성	44.6	35.5	19.9	100.0	3.5	1(보편적) - 7(선별적)

주: 부정은 1~3점, 긍정은 5~7점에 응답한 것을 합한 것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이 3.3점으로 활동 평가 문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전체의 49.1%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정보 투명성도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전체의 51.0%가 “중요한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의 식품관리정책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지, 아니면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는지 평가한 결과, 전체의 44.6%가 특정집단 중심이라고 응답하여 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정부 활동에 대한 신뢰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은 10대와 20대, 30대와 4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세 집단에서 신뢰 차이가 있었다. 60대 이상에서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대의 젊은 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20대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하거나 동조했던 경험이 저신뢰 원인으로 볼 수 있었다. 동일 사건을 경험한 세대 효과(cohort effect)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 그리고 지역규모를 매치시키면, “20대

〈표 6〉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정부활동 평가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검증값 (t, F)	P
	일반적 특성	집단				
정부활동	성별	남	702	3.42	-0.195	.846
		여	728	3.43		
	연령	10대	22	3.00 ^a	15.582	.000***
		20대	259	3.17 ^a		
		30대	300	3.29 ^{ab}		
		40대	320	3.28 ^{ab}		
		50대	250	3.57 ^{bc}		
		60대 이상	279	3.88 ^c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26	3.86 ^c	30.501	.000***
		고등학교 졸업	415	3.53 ^b		
		대학교 졸업 이상	789	3.24 ^a		
	주관적 계층	상	179	3.62 ^b	4.254	.014*
		중	653	3.44 ^a		
		하	598	3.35 ^a		
	건강상태	상	845	3.47 ^b	3.106	.045*
		중	367	3.43 ^b		
		하	218	3.25 ^a		
	지역	대도시(7대 도시)	707	3.37	2.804	.061
		중소도시(동)	509	3.44		
		읍·면 지역	214	3.58		

대도시 거주 대졸 집단이 정부 활동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계층이 높고, 연령이 높은 집단이 정부 활동을 상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위험지위(risk position)와 연결되는 것으로, 위험회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먹거리 파동(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전체의 70.1%가 “신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

〈표 7〉 정부가 제공하는 먹거리 관련 정보의 신뢰수준

	매우 신뢰	비교적 신뢰	불신하는 편	매우 불신	합계(N)
2008년 광우병 정보	1.3	28.6	50.8	19.3	100.0(1430)
2008년 정부발표 정확도	1.0	28.1	57.1	13.8	100.0(1430)
2010 구제역 정보	1.3	32.4	51.5	14.8	100.0(1430)

다. 2008년 당시의 정부 발표가 ‘정확’했는가를 다시 질문한 결과, 전체의 70.9%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먹거리 정보를 불신하는 것과 정부의 공공성을 불신하는 것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전체의 66.3%가 “신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를 볼 때, 2008년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불순 세력의 선전·선동에 의한 국민의 불신과 과격시위’라는 논리가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시위로 이어지지 않은 구제역 발표에 대한 정부 불신도 2008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의 불신(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 위험통제기구에 대한 신뢰 등이 중요하다(정진성 외, 2010: 36). 여기에 2008년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라는 사회적 민감성(public concern) 때문에 위험이 정치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정부 발표의 정보신뢰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주관적 계층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은 10대에서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두 집단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젊은 연령 집단은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으며, 40대의 일정 규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에 50대의 일부와

〈표 8〉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정부정보 신뢰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검증값 (t, F)	p
	일반적 특성	집단				
정부정보 신뢰	성별	남	702	2.16	-0.290	.772
		여	728	2.17		
	연령	10대	22	1.95 ^a	19.620	.000***
		20대	259	2.03 ^a		
		30대	300	2.00 ^a		
		40대	320	2.12 ^{ab}		
		50대	250	2.26 ^{bc}		
		60대 이상	279	2.42 ^c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26	2.40 ^c	28.492	.000***
		고등학교 졸업	415	2.21 ^b		
		대학교 졸업 이상	789	2.07 ^a		
	주관적 계층	상	179	2.33 ^b	7.496	.001**
		중	653	2.14 ^a		
		하	598	2.13 ^a		
	건강상태	상	845	2.16	1.156	.315
		중	367	2.19		
		하	218	2.11		
	지역	대도시(7대 도시)	707	2.15	0.290	.748
		중소도시(동)	509	2.18		
		읍·면 지역	214	2.15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를 볼 때 구체적인 먹거리 파동이나 사건과 관련될 경우, 연령집단이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대졸 이상이 정부 정보에 대한 저신뢰 집단을 구성하고, 중졸 이하가 고신뢰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계층 수준 또한 연령과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50대 이상의 비교적 잘사는 계층이 정부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식품업체와 유통시장에 대한 신뢰

시장 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대규모 가공업체나 대형마트, 그리고 소규모 가공업체나 재래시장을 구분하여 신뢰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에 대한 신뢰 경향과 ‘소규모’에 대한 불신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대규모로 식품을 가공하는 국내 식품업체에 대한 신뢰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31.3%가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불신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4%에 머물렀다.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전체의 31.7%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5.5%에 불과해 신뢰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해외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대형’ 여부를 떠나서 신뢰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8.3%인 반면에 불신한다는 응답이 36.0%를 차지하였다.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나 중국산 멜라민 과동 등 수입농산물이나 수입가공식품에서 먹거리 안전 문제가 많이 나타난 과거의 경험이 학습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9〉 대규모 업체나 대형마트에 대한 신뢰수준

	불신하는 편	보통	신뢰하는 편	합계(N)	평균
국내 대규모 식품가공업체	23.4	45.3	31.3	100.0(1430)	3.1
해외 대규모 식품가공업체	36.0	45.7	18.3	100.0(1430)	2.8
대형마트	15.5	52.8	31.7	100.0(1430)	3.2

주: 불신하는 편은 1~2점, 신뢰하는 편은 4~5점에 응답한 것을 합한 것임.

〈표 10〉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대형 기관 신뢰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검증값 (t, F)	p
	일반적 특성	집단				
대형 기관	성별	남	702	2.88	-0.823	.411
		여	728	2.90		
	연령	10대	22	2.77 ^a	2.559	.026*
		20대	259	2.89 ^{ab}		
		30대	300	2.89 ^{ab}		
		40대	320	2.81 ^{ab}		
		50대	250	2.87 ^{ab}		
		60대 이상	279	3.00 ^b		
		중학교 졸업 이하	226	3.03 ^b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415	2.87 ^a	5.773	.003**
		대학교 졸업 이상	789	2.86 ^a		
	주관적 계층	상	179	2.96	1.184	.307
		중	653	2.89		
		하	598	2.87		
	건강상태	상	845	2.91	2.219	.109
		중	367	2.90		
		하	218	2.80		
	지역	대도시(7대 도시)	707	2.89	0.081	.923
		중소도시(동)	509	2.90		
		읍·면 지역	214	2.87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대규모 식품가공업체나 대형마트에 대한 신뢰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은 10대, 20대에서 50대, 그리고 60대의 세 집단에서 신뢰 수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대규모 기관·대형마트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불신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대에서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보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냈던 업체가

대규모 회사였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과 고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소형 기관에서 가장 신뢰수준이 낮은 업체는 소규모로 식품을 가공하는 국내 식품업체로 나타났다. 전체의 33.0%가 불신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17.1%만이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소규모 슈퍼마켓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다. 전체의 21.4%가 불신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16.9%만이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소규모’ 가공업체나 유통업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이들이 먹거리 사건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소규모지만 이윤논리가 철저하게 지배하지 않고, 소비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생산자의 관계형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래시장이나 이파트 알뜰시장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래시장은 전체의 32.4%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불신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해, 대안 소비행위를 주도하는 생협이나 직거래 매장이 아닌 일반 소비행위를 주도하는 관행 시장으로서는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같은 유통시장이지만 한살림이나 아이쿱과 같은 생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의 43.6%가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안전한 먹거리 전략은 ‘생협’이라는 대안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시장의 전략이 근대 먹거리 체계가 만들어낸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제와 고급화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생협운동은 대안체계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왔다(박형신, 2010: 182). 따라서 이러한 대안성(alterity)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신뢰로 나타난 것이다.

〈표 11〉 소규모 업체나 시장에 대한 신뢰수준

	불신하는 편	보통	신뢰하는 편	합계(N)	평균
국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33.0	49.9	17.1	100.0(1430)	2.8
소규모 슈퍼마켓	21.4	61.7	16.9	100.0(1430)	3.0
재래시장	15.9	51.7	32.4	100.0(1430)	3.2
아파트 알뜰시장	16.6	58.1	25.3	100.0(1430)	3.1
생협(한살림, 아이쿱 등)	9.0	47.4	43.6	100.0(1430)	3.4

주: 불신하는 편은 1~2점, 신뢰하는 편은 4~5점에 응답한 것을 합한 것임.

〈표 12〉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소형 기관 신뢰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검증값 (t, F)	p
	일반적 특성	집단				
소형 기관	성별	남	702	3.00	-0.611	.541
		여	728	3.02		
	연령	10대	22	2.98 ^a	7.551	.000***
		20대	259	3.01 ^{ab}		
		30대	300	2.99 ^a		
		40대	320	2.90 ^a		
		50대	250	2.99 ^a		
		60대 이상	279	3.17 ^b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26	3.17 ^b	14.484	.000***
		고등학교 졸업	415	3.03 ^a		
		대학교 졸업 이상	789	2.95 ^a		
	주관적 계층	상	179	3.02	1.966	.140
		중	653	2.98		
		하	598	3.04		
	건강상태	상	845	3.05 ^b	5.154	.006**
		중	367	2.95 ^a		
		하	218	2.95 ^a		
	지역	대도시(7대 도시)	707	2.98	2.626	.073
		중소도시(동)	509	3.02		
		읍·면 지역	214	3.08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소형 기관 신뢰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건강상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은 10대에서 50대, 그리고 60대의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신뢰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장 영역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과 고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집단이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을 신뢰하는 반면에 젊고, 학력이 높은 집단이 대형 마트나 대규모 식품기업을 신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에 따른 신뢰 수준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에 비해 신뢰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건강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대안적 소비행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언론과 전문기관 정보신뢰

객관적인 먹거리 위험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이고 만들어진 위험은 미디어에 의하여 매개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위험은 사건이나 파동의 형식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고, 구성된 위험은 인식과 지식에 의해서 표상, 상상, 지각되는 위험이다. 그렇다면 먹거리 불안이나 공포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더 영향을 받는가? 캐스웰에 따르면, 먹거리 공포는 실제의 먹거리 사건이 아니라 시민을 두렵게 만드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먹거리 불안의 발생과 확산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Casewell, 2006: 10). 미디어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신뢰를

〈표 13〉 먹거리 관련 언론정보에 대한 신뢰수준

	불신하는 편	보통	신뢰하는 편	합계(N)	평균
TV 뉴스나 프로그램	7.5	42.1	50.4	100.0(1430)	3.5
(활자) 신문	10.3	47.9	42.0	100.0(1430)	3.3

주: 불신하는 편은 1~2점, 신뢰하는 편은 4~5점에 응답한 것을 합한 것임.

형성할 수도, 불신을 확산할 수도 있는 도구다. 여기서는 미디어를 TV 뉴스나 활자 매체로 제한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TV 뉴스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보의 신뢰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50.4%가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7.5%만이 불신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활자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42.0%가 신뢰하였고, 10.3%만이 신뢰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뢰수준은 구체적인 먹거리 파동에 대한 정부의 정보에 대한 신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언론이 지니는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높은 신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언론정보에 대한 신뢰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은 10대에서 30대, 그리고 60대의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뢰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언론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는데,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젊은 층과 노년층이라는 연령 효과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보수 언론이 보여주었던 편파적인 보도를 기억하는 20대와 30대의 고학력 집단에서 언론정보에

〈표 14〉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언론정보 신뢰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검증값 (t, F)	p
	일반적 특성	집단				
언론 정보	성별	남	702	3.38	-0.934	.351
		여	728	3.42		
	연령	10대	22	3.27 ^a	8.237	.000***
		20대	259	3.32 ^a		
		30대	300	3.29 ^a		
		40대	320	3.34 ^{ab}		
		50대	250	3.52 ^{bc}		
		60대 이상	279	3.56 ^c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26	3.57 ^c	14.305	.000***
		고등학교 졸업	415	3.45 ^b		
		대학교 졸업 이상	789	3.32 ^a		
	주관적 계층	상	179	3.46	0.999	.368
		중	653	3.41		
		하	598	3.38		
	건강상태	상	845	3.43	2.036	.131
		중	367	3.38		
		하	218	3.33		
	지역	대도시(7대 도시)	707	3.41	1.093	.335
		중소도시(동)	509	3.37		
		읍·면 지역	214	3.44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부정적 사회 지능이 교육과 함께 타인과 사회에 대한 높은 기준에 근거하여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구성하고, 이 기준과 현재를 비교하기 때문에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박병진, 2007: 96).

지식과 정보는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먹거리와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을 경고하는 지식은 다른 지식보다 더 신뢰를 받는 경향이 있다. 시민은 위험정보, 위험지식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깨지기 쉽다는 것이다. 즉, 신뢰를 얻기보다는

〈표 15〉 먹거리 관련 전문기관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

	불신하는 편	보통	신뢰하는 편	합계(N)	평균
한국식품검사기관(식약청)	9.7	35.0	55.3	100.0(1430)	3.5
외국기관(FDA, WHO 등)	9.6	42.7	47.7	100.0(1430)	3.4

주: 불신하는 편은 1~2점, 신뢰하는 편은 4~5점에 응답한 것을 합한 것임.

이를 깨뜨리기가 훨씬 쉽다. 특히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훨씬 쉽게 믿으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위험하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훨씬 쉽다. 신뢰를 상실한 사회에서는 정부나 전문기관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이는 위험관리 정책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위험 중에 특히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위험일 때 국민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평가와 판단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동이나 2010년 구제역 사태에서 먹거리 위험이 정치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대한 불신이 무엇보다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먹거리 위험(안전)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보의 신뢰여부는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험정보의 신뢰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식품검사기관(식약청)과 FDA나 WHO와 같은 외국 식품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질문하였다. 한국 전문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는 전체의 55.3%가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9.7%만이 불신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외국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는 47.7%가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9.6%만이 불신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신뢰수준은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전문기관 정보에 대한 신뢰 차이를 분석한

〈표 16〉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전문기관 신뢰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검증값 (t, F)	p
	일반적 특성	집단				
전문 기관	성별	남	702	3.43	-2.492	.013*
		여	728	3.53		
	연령	10대	22	3.45 ^a	3.485	.004**
		20대	259	3.49 ^a		
		30대	300	3.47 ^a		
		40대	320	3.35 ^a		
		50대	250	3.58 ^b		
		60대 이상	279	3.55 ^b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26	3.52	1.377	.253
		고등학교 졸업	415	3.51		
		대학교 졸업 이상	789	3.45		
	주관적 계층	상	179	3.53	0.819	.441
		중	653	3.49		
		하	598	3.46		
	건강상태	상	845	3.51	1.373	.254
		중	367	3.43		
		하	218	3.46		
	지역	대도시(7대 도시)	707	3.49	0.203	.816
		중소도시(동)	509	3.47		
		읍·면 지역	214	3.46		

결과, 성과 연령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는 전문기관 정보의 신뢰 차이에서 유일하였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전문기관 정보를 신뢰하는 편이었다. 연령은 10대에서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신뢰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언론정보에 대한 신뢰는 전문기관 정보에 대한 신뢰보다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언론정보든 전문기관 정보든 가리지 않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젊은 층은 사회참여 경험에 언론정보 불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5. 먹거리 신뢰 영향요인 분석

먼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인과관계를 검증해보았다. 여러 검증모형을 고안하였는데 이를 순서대로 기본모형, 정부포함모형, 시장포함모형, 사회포함모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모형은 해당 변수군을 단계적으로 포함해가면서 모형의 적합성과 함께 개별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안전성 신뢰에 대한 회귀모형에서는 기본모형에서 변수군이 추가되는 모형별로 설명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R^2 가 .040에서 .122, .136 그리고 .141로 변화). 기본모형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 주관적 건강 평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었다. 연령, 주관적 계층, 건강 평가는 정적으로, 그리고 교육수준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주관적 계층평가가 높을수록 안전성 신뢰가 높아진다. 반면에 교육 정도는 그 역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포함모형에서는 세 집단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설명력은 기본모형에 비해 약 .082가 증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서 주관적 계층 평가 영향이 사라지고 지역규모가 새롭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먹거리 신뢰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세 변수에서는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집단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다.

시장포함모형에서는 두 집단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설명력은 정부포함모형보다 약 .005 증가하였다. 설명력이 아주 낮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 양

〈표 17〉 안전성 신뢰에 관한 모형별 회귀분석 (표준화 회귀계수)

	기본모형	정부포함모형	시장포함모형	사회포함모형
인구·사회변수				
연령	.067*	.005	.005	.000
성별_여성	-.019	-.018	-.017	-.021
교육수준_고졸	-.123***	-.101**	-.091**	-.097**
교육수준_대졸	-.152***	-.101**	-.088*	-.094*
주관적 계층	.074***	.030	.036	.036
건강 평가	.084***	.076***	.065**	.061**
지역규모_대도시	-.056	-.070*	-.078**	-.081**
지역규모_중소도시	-.004	-.022	-.027	-.028
정부				
활동평가		.078**	.063**	.056*
정보신뢰		.232***	.226***	.219***
기관평가		.046	-.013	-.035
시장				
대형기관 신뢰			.057*	.049
소형기관 신뢰			.101***	.087***
사회				
시민단체 신뢰				.015
언론정보 신뢰				.038
전문기관 신뢰				.046
R ²	.040	.122	.136	.141

P=*<0.1, **<0.05, ***<0.01

변수의 관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 효과와 건강 효과, 지역 효과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신뢰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새로 추가된 두 변수는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시장기구와 조정기능에 대한 신뢰가 먹거리 안전성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사회포함모형에서는 세 집단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설명력은 시장포함모형에 비하여 약 .014 증가하였다. 교육 효과와 건강 효과, 지역 효과가 약화하였지

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신뢰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단지 시장 변수에서 대규모·대형 효과가 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새로 추가된 두 변수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먹거리 안전성 신뢰에는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 평가, 지역규모, 정부활동 평가, 정부발표 정보 신뢰, 소규모 가공업체 신뢰가 어느 모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연령변수는 기본모형 이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나 시장신뢰 등이 세대효과와 연관되어 안전성 신뢰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먹거리 생산자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인과관계를 검증해보았다.

생산자 신뢰에 대한 회귀모형에서도 기본모형에서 변수군이 추가되는 모형별로 설명력이 증가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R^2 가 .030에서 .055, .089 그리고 .164로 변화). 특히 사회포함모형에서 설명력이 상당히 상승($\Delta R^2 = .164 - .089 = .075$)하였는데 이는 이 양 변수 간의 관계가 상당히 큼을 말하는 것이다. 안전성 신뢰에서는 정부 신뢰수준이 영향력이 큰 변수군이었다면, 생산자 신뢰에서는 시민사회 관련 변수들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기본모형에서는 주관적 계층, 주관적 건강 평가, 지역규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었다. 주관적 계층, 건강 평가는 정적으로, 그리고 지역규모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 스스로 잘살고,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생산자에 대한 신뢰가 높았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낮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정부포함모형에서는 안전성 신뢰 영향요인과는 달리 정부기관 평가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먹거리 안전은 정부의 위험관리와

〈표 18〉 생산자 신뢰에 관한 모형별 회귀분석 (표준화 회귀계수)

	기본모형	정부포함모형	시장포함모형	사회포함모형
인구·사회변수				
연령	.047	.032	.032	.012
성별_여성	.004	-.002	.000	-.012
교육수준_고졸	-.066	-.044	-.029	-.050
교육수준_대졸	-.040	-.007	.014	-.018
주관적 계층	.105***	.088***	.096***	.097***
건강 평가	.084***	.081***	.065**	.060**
지역규모_대도시	-.073*	-.073*	-.084**	-.091**
지역규모_중소도시	-.041	-.046	-.054	-.061
정부				
활동평가		-.022	-.045	-.047
정보신뢰		.065**	.056*	.066**
기관평가		.140***	.051	-.018
시장				
대형기관 신뢰			.084**	.075**
소형기관 신뢰			.156***	.090***
사회				
시민단체 신뢰				.140***
언론정보 신뢰				-.009
전문기관 신뢰				.112***
R ²	.030	.055	.089	.164

P=*<0.1, **<0.05, ***<0.01

정보 및 소통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생산자 신뢰는 이들에 대한 감독 및 조정과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변수는 생산자 신뢰 모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 업체나 재래시장 등을 신뢰하는 집단이 생산자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었다. 시장변수가 추가되면 정부 영역 변수들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사회포함모형에서는 안전성 신뢰와는 달리 시민단체 신뢰 수준과 전문기관 신뢰 여부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정부기관 평가는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시장영역 변수들도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를 볼 때 시민단체 활동이나

참여는 생산자와 같은 먹거리 주체에 대한 신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자 신뢰와 같은 대인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에 안전성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활동의 제도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하였다.

V. 맺는말

이 연구는 일관되게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먹거리 신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정부 기관이나 정책, 정보 등을 신뢰하는 집단은 일관되게 먹거리 안전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먹거리 신뢰집단이 바로 60대 이상의 연령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계층 상위집단으로 믿는 집단,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먹거리 안전을 신뢰하지 않는 집단은 20대와 30대의 고학력, 대도시 거주 사람들이다. 많은 연구는 이들이 바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였으며, 먹거리 대안운동에 관심이 많거나 참여하는 집단임을 알려준다. 연령별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이 듦 효과(aging effect)가 아니라 사건 경험, 의식 공유, 가치 지향 등이 매치되는 세대효과(cohort effect)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는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분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때때로 중대한 정치적 행위나 결과를 낳는다. 이것을 기존의 정치를 바라보는 틀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합리성 시장이론을 가지고는 2008년 촛불집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될 만한 해석을 찾으려고 하고, 쉽게 떠오르는 해석은 ‘정부’와 ‘시장’과 같은 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먹거리 불안이 먹거리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먹거리 정치(food politics)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먹거리 불신(감정)은 실제의 객관적 위험이 아닌 미지의 주관적 위험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먹거리 신뢰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완성은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만들어진 구조적 신뢰보다 ‘만들어가는’ 관계적 신뢰, 대인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부딪치며 자급자족하던 전통적 먹거리 체계가 먹거리 자체의 객관적 안전성과 무관하게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먹거리 신뢰의 형성은 공적 영역의 소통 능력, 시장 영역의 대안적 소비행위, 시민사회 영역의 자발적 관계형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2012년 5월 21일: 접수/ 2012년 6월 5일: 수정/ 2012년 6월 11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선업·이해진·김철규. 2012. “먹거리 소비 양식의 사회계층적 분화”, 『먹거리와 건강불평등—진단과 대안』, SSK 공동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김철규. 2008. “현대 식품체계의 동학과 먹거리 주권”, 『ECO』 12(2): 7-32.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형신. 2010.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 『정신문화연구』 33(2): 161-193.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8. 『위험과 에너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 보고서』.
- 윤병선. 2004.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14(1): 7-41.
- 이수인. 2010.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민주화를 향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 및 정보의 매개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162-203.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 311-335.
- _____.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61-98.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civic engagement), 사회자본(social capital), 그리고 정부신뢰(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한국정치학회보』 36(1): 87-341.
- 정진성·이재열·조병희·구해란·안정옥·장덕진·고형면·장상철. 2010.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출판부.
- SSK 먹거리지속가능성연구팀. 2011. 『먹을거리 위기와 한국인의 식습관에 관한 조사보고서』 (미간행).
- Beck, U. 1992. *Risk Society*, London: Sage.
- Boix & Posner.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October): 686-694.
- Casewell, J. 2006. “A Food Scare a Day: Why Aren't We Better at Managing Dietary?”, *Human and Ecological Risk Assessment* 12: 10.
- Flynn, J., W, Burns, C. K. Mertz & Slovic.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3): 417-429.
- Furedi, F. 2004. *Culture of Fear Revisited*, London: Continuum.
- Glenn, N. 1984. *Cohort Analysis: A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07-005*, Ber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coby, William G. 1988. "The Source of Liberal-Conservative Thinking: Education and Conceptualization", *Political Behavior* 10(4): 316-332.
- Kasse, M. 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1-21.
- Kim, Chul-Kyoo & James Curry. 1993. "Fordism, Flexible Specialization and Agri-cultural Restructuring", *Sociologia Ruralis* 33(1): 35-54.
- McMichael, Philip. 2005. "Global Development and the Corporate Food Regime", In Frederick H. Buttel & Philip McMichael(ed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of Global Development* 11, JAI Press.
- Morgan, R. M. & Hunt, S. D. 1994.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s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58: 63-67.
- Pagden. 1988. "The Destruction of Trust and its Economic consequence in the Case of Eighteenth-century Naples." In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edited by D. Gambetta. Oxford: Blackwell.
- Pennings, J. M. E., B. Wahsink & M. Meuleuberg. 2003. "Consumer reactions to a crisis: a note the case of the madcow disease", *Food & Brand Lab*, University of Illinoi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N. J. : Princeton.
- Siegrist, M. 2000. "The influence of trust and perception of risks an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genetechinology", *Risk Analysis* 20(2): 195-204.
- Sellerberg, A. M. 1991. "In food we trust? Vitally necessary confidence and unfamiliar ways of attaining it." in E. L. Furst, R.(eds). *Palatable Words: Sociocultural Food Studies*, Oslo: Solum Forlag. pp.193-202.

Abstrac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Influencing In Food Trust

Kim Heu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various factors which effec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rust level of food trust. What is the level of trust for Korean food? How are the food risk-related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assessed? Are the markets playing a role in controlling dangerous food? How do the participations and activities of the civil society help form food trust? What factors eventually affect food trust in Korean societ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face-to-face interviews for 1,430 men and women aged 19 or over nationwide in August, 2011,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resul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ld people over 60, less-educated people who finished only middle schools, people who believe that they live well, and people who live in country sides trust food. In contrast, highly-educated people in their twenties or thirties, housewives, and people residing in large cities trust neither the government nor food. They were the groups who led the candle light protests against mad cow disease in 2008, and also participated in alternative food movements with keen interests. Second,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hat food trust was not formed by trust in the system, but by trust in people. Therefore, relational and personal trust is more important than trust in the system.

Key Words: food trust, food risk society, alternative food movement, social trust, personal trust

김홍주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농민가족의 생존전략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원광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역사회와 농업, 가족과 복지 등이며 최근에는 공공급식과 먹거리 복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저서는 『한국농민의 희망과 불안』 등 3권이 있으며, 논문은 “학교급식운동을 통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방안” 등 40여 편이 있다. E-mail: kanddol@wku.ac.kr